

수은 북한경제

EXIM NORTH KOREA ECONOMIC REVIEW

2010. 여름호

Contents

◆ 기획논단

- 라선특별시 지정배경과 개발 과제 / 배종렬 1
- 북한의 자체 식량 공급능력 평가 / 홍성국 25
- 북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 컴퓨터 운영체제 ‘붉은별’ 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선 43

◆ 현안이슈

- 중국의 최근 북한지역 개발 동향과 향후전망 / 김주영 63

◆ 자 료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10. 3. 26) 주요 내용 77
- 지원사업소개 : (사)나눔인터내셔널의 북한 보건의료협력사업 78
- 남북협력동향(‘10. 3. 23 ~ ‘10. 6. 21) 88
- 주요기관의 남북한 국가위험도(Country Risk) 평가 127
- 남북협력기금 통계(2010년 5월말 현재) 128

라선특별시 지정배경과 개발과제

배 종 렬*

- I. 문제의 제기
- II. 특별시 승격의 배경과 최근 개발동향
- III. 라선특별시 개발과제
- IV. 맺음말

요 약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 이후 라선시는 특별시로 승격되었다. 2차 핵실험 이후 경제제재 보다는 북·중 경제협력을 우선시하는 중국의 태도, 러시아의 연해주와 라선시에 대한 관심증대로 중국과 러시아간의 경쟁구도 형성, 남북경제관계 개선의 정체 등이 그 배경이었다. 2008년 4월 나진항 3호 부두의 50년 사용권이 중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이후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계획의 국무원비준 등 북한 인프라건설에 대한 중국의 태도변화가 결정적이었다.

라선특별시 건설에 있어서의 특징은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전면등장과 그 개발 지원기관으로 국가개발은행이 설립된 점이었다. ①지대관리운영조직의 개편과 라선경제무역지도 위원회의 운영, ②북남협력법제와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의 모순체계 시정, ③특별시와 북한의 여타경제와의 연계성 강화, ④북·중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지대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라선경제 무역지대법의 수정보충도 주목되었다.

*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1990년대 초반 이후 처음으로 재조명된 라선특별시의 건설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우선 효율적 금융시스템의 구축, 국가간 이해조정, 지대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이 요망된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준비는 ‘군수와 전략물자를 제외한 특수부분의 축소와 시장경제제도의 도입’이라는 박봉주내각이 추진했던 기조에 따라 김정일 통치자금 및 당·군 특수부분의 자금이 동원되고 시장경제로부터 중장기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제도현대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현 시점에서 북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개발은행의 운영시스템 설계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I. 문제의 제기

2010년 1월 4일, 북한은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0호(라선시를 특별시로 하며, 내각과 해당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를 발표했다.¹⁾ 이는 2010년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사설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대외시장의 확대와 무역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한데 대한 내각의 첫 조치였다.²⁾ 곧이어 국방위원회의 국가개발은행 설립방침이 천명(2010. 1. 20)되고³⁾ 최고인민회의는 상임위원회 정령 제583호로 라선지대법을 개정(2010. 1. 27)하였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국가개발은행 설립방침이었다. 국가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할 수 있는 현대적 금융규범과 체계를 갖추고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 “대외경제협력기관으로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투자유치 및 자금원천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체로 활동”한다는 것⁴⁾이 그 골자였다. 2010년 3월 10일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개최된 국가개발은행 이사회 1차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대표 전일춘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국가개발은행규약, 운영방안, 2010년 재무예산초안, 전문가위원회규약, 경영기구방안 등이 통과되었는데, 동 규약에 따르면 ①국가개발은

1) 민주조선, 2010. 1. 5 및 노동신문, 2010. 1. 6.

2) 민주조선, 2010. 1. 1.

3)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진행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명령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활동을 보장할 데 대하여」, 국방위원회결정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함에 대하여」,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조정위원회를 설립함에 대하여」가 전달되었다. 조선신보, “국방위원회결정으로 국가개발은행 설립,” 2010. 1. 27.

4) 조선신보, 2010. 1. 27.

행은 국가재정예산외에 자금을 모집하고, ②국가경제정책에 따라 실시하게 될 주요 건설대상에 직접투자하고 자금면의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⁵⁾

주지하다시피 라선시⁶⁾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의 북한측 지역으로 동북아경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중핵적 연결고리였지만, 미흡한 개혁·개방과 인프라건설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난항으로 그 개발이 순탄하지 못했다. 특히, 1997년 중반 동아시아 금융위기이후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라선경제무역지대로 조정하는 등 북한측의 개발방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라선경제특구는 국제적 관심으로부터 멀어졌었다. 2010년 3월,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 관계자는 향후 10년 계획으로 ①먹는 문제, ②철도, ③도로, ④항만, ⑤전력, ⑥에너지 등 6가지 경제기반 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조선대풍국제그룹은 국가개발은행의 등록자본으로 100

억 달러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⁷⁾

II. 특별시 승격의 배경과 최근 개발동향

라선시의 건설에 있어서 결정적 전기는 2009년 1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라선시 현지도였다. 1991년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창설된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이루어진 라선시 현지도에서 김정일은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외시장의 확대를 주문하였다. 즉, 라선은 중요한 대외무역거점의 하나이니 ①철도와 해상운수부문의 발전, ②수출규율의 엄수, ③품질의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⁸⁾

1. 특별시 승격의 배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라선시를 주목한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북·중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북한의 2차 핵실험

5) 길림신문, “조선국가개발은행, 평양서 공식 설립,” 2010. 3. 12.

6) 1991년 12월 28일 라진시의 14개 동·리와 선봉군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km²의 지역이 정무원 결정 74호에 의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되었다. 1993년 1월 13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 채택(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되었고, 9월 24일에는 중앙인민위원회 법령으로 은덕군 3개 리(125km²)가 선봉군으로 이관되면서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면적은 746km²로 확대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평양, 1995, p. 13. 그러나 1999년 2월에는 자유가 빠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으로 개정되었고, 2000년 9월에는 행정구역이 라선시로 개칭되었다. 조선신보, “對外經濟發展—環境整備,” 2010. 1. 27.

7) 조선신보, “국제금융 리용하여 국가경제기반 구축,” 2010. 3. 10.

8) 조선신보, “對外經濟發展—環境整備,” 2010. 1. 27.

(2009. 5.25)이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⁹⁾ 중국이 또 다시 경제제재보다는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2009년 7월부터였다. 즉, ①중국 국무원이 요령연해경제벨트(2009.7.1)¹⁰⁾와 장길도 개발(2009.8.30)을 국가전략으로 비준하고, ②온가보(溫家寶) 총리의 방북을 통해 각종 북·중 경제협력협정에 서명함¹¹⁾에 따라 북한도 상응한 조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이었다. 특히, 장길도 개발개방 선도구를 위한 중국의 두만강구역 합작개발규칙요강(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的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 즉 ‘장길도개발’의 정식공개¹²⁾가 결정적이었다.

훈춘을 창구로, 연길-용정-도문(연룡도)을 최전방으로, 장춘-길림을 엔진으로, 동북후배지를 버팀목으로 한다는 ‘장길도개발’¹³⁾에 대해 길림대학 우하오(Wu hao) 교수는 그 전략적 목표가 ①연변지역 개발개방의 새로운 모델 모색, ②동북 노(老)공업기지 진흥의 진일보 추진, ③동북아지역협력의 진일보 촉진, ④길림성 사회경제발전의 가속화이며, ‘장길도개발’의 주요내용은 1)자체 내부 건설계획(공간배치, 산업발전, 기반시설, 환경보호), 2)중국 국내 기타지역과의 연동개발계획, 3)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의 참여, 4)건설가속화의 보장장치로 구성되며, 특히 TRADP참여계획에는 ①러시아 및 북한과 인접지구의 기반시설건설협력(항구,

9)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전문가들은 일제히 북한의 핵전략이 ‘협상카드용’이 아니라 ‘핵보유’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환구시보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네티즌의 66%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環球時報, 2009. 6. 3: <http://www.huanqiu.com>.

10) 료령연해경제대발전구획(遼寧沿海經濟帶發展規劃), 즉 요령연해경제벨트의 경제발전전략 핵심은 ‘1핵 1축 양익모델’로서 대련을 핵으로, 대련-영구-반금을 주축으로 하여, 반금-금주-호로도 발해연안(발해익)과 대련-단동-황해연안(황해익)을 양 날개로 한다는 구상인데, 요령성 발전개혁위원회 주최정 부주임은 그 전략적 의의를 ①북방연해지역의 발전수준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②중국 동북지역과 환발해지역을 상호 융합시키는 한편, ③동북아지역 국가간 경제협력의 확대라고 언급하였다. 배종렬,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2010. 4. 20, p. 6; 료녕신문 [<http://www.lnsm.ln.cn>], “빈해 료녕은 어떻게 건설되나,” 2009. 7. 23 참조.

11) 2009년 10월 4일 북·중간에는 「조선정부와 중국정부사이의 조약정리에 관한 의정서」,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교육기관사이의 교류 및 협조에 관한 합의서」, 「소프트웨어산업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양해문」, 「국가품질감독기관사이의 수출입품공동검사에 관한 의정서」, 「중국 관광단체의 조선관광실현에 관한 양해문」, 「야생동물보호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서」 등의 협정이 조인되었다.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에 포함된 압록강대교 신설은 2010년 2월 25일 「조선정부와 중국정부사이의 압록강 국경다리 공동건설과 관리에 관한 협정」이 단동에서 정식으로 체결되면서 구체화되었다. 배종렬, 위의 논문, pp. 7~8 참조.

12) 길림신문, “〈선도구전망계획요강〉 18일 북경에서 정식 공개,” 2009. 11. 18.

13) 장길도개발의 대상지역은 장춘시의 부분적 지역(장춘시 도시지역, 덕혜시, 구태시와 농안현), 길림시의 부분적 지역(길림시 도시구역, 교하시와 영길현), 연변조선족자치주 등 7만 3,000평방킬로미터로 길림성면적의 39%를 차지하고 있다(인구는 1,090만명으로 40%).

〈표 1〉 “선도구전망계획요강”관련 100개 중점건설대상: 대외통로부문

프로젝트명	프로젝트개요	건설기한	추진체계
22. 팔도에서 삼합을 경유하여 청진에 이르는 고속도로 경내구간	길이 47킬로미터, 총투자 28억 위안	2015년	대상실시구역에는 연길, 룡정이 들며 주교통운수국에서 책임지고 주통상구관리판공실과 관련 현 시 정부에서 협력
23. 훈춘에서 권하를 경유하여 라진에 이르는 고속도로 경내구간	길이 39킬로미터, 총투자 23억 위안	2015년	대상실시구역에는 훈춘시가 들며 주교통운수국에서 책임지고 주통상구관리판공실과 관련 시정부에서 협력
24. 화룡에서 남평을 경유하여 청진에 이르는 고속도로 경내구간	길이 50킬로미터, 총투자 30억 위안	2015년	대상실시구역에는 화룡이 들며 주교통운수국에서 책임지고 주통상구관리판공실과 관련 시정부에서 협력
25. 훈춘에서 장령자를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고속도로	길이 14킬로미터, 총투자 8억 위안	2015년	대상실시구역에는 훈춘시가 들며 주교통운수국에서 책임지고 주통상구관리판공실과 관련 시정부에서 협력
26. 도문(중국)-남양(조선)-두만강(조선)-햇산(러시아)철도 합작개조대상	길이 126킬로미터, 총투자 24억 3000만 위안	2020년	대상실시구역에는 중국 도문-조선 남양-조선 두만강-러시아 햇산이 들며 주통상구관리판공실에서 책임지고 도문시정부에서 협력
27. 중국-조선 청진철도합작개조(청진항사용)대상	길이 171.1킬로미터, 총투자 20억 위안	2020년	대상실시구역에는 중국 도문-조선 청진이 든다. 주통상구관리판공실에서 책임지고 도문시정부에서 협력
28. 화룡에서 남평을 경유하여 조선 무산에 이르는 철도	길이 53.5킬로미터, 총투자 16억 위안	2015년	대상실시구역에는 화룡시가 들며 주통상구관리판공실에서 책임지고 화룡시정부에서 협력
29. 중국 도문-조선 라진 철도합작개조대상	길이 158.8킬로미터, 총투자 12억 7000만 위안	2020년	대상실시구역에는 중국 도문-조선 라진이 든다. 주통상구관리판공실에서 책임지고 도문시정부에서 협력
30. 룡정 개산툰 철도통상구 건설대상	철도길이 2.5킬로미터, 철교 복구건설, 총투자 1억 5000만 위안	2020년	대상실시구역에는 룡정시 개산툰-조선 삼봉이 든다. 주통상구관리판공실에서 책임지고 룡정시정부에서 협력
31. 권하, 도문, 사타자, 개산툰, 삼합, 남평 통상구다리건설대상	총길이 2152미터, 총투자 5억 위안	-	대상실시구역에는 훈춘, 도문, 룡정, 화룡이 든다. 주교통운수국에서 책임지고 주통상구판공실, 관련 현, 시 정부에서 협력
32. 훈춘춘화분수령통상구 건설대상	춘화분수령통상구 개척, 총 투자 2억 위안	2020년	대상실시구역은 훈춘시이며 주통상구판공실에서 책임지고 훈춘시정부에서 협력
33. 중로인접지역교통기초 시설합작대상	훈춘철도통상구 확건, 총투자 3억위안	-	대상실시구역은 훈춘시이며 주통상구판공실에서 책임지고 훈춘시정부에서 협력

출처: 연변일보, 2009년 12월 21일자, 23일자, 그리고 28일자로부터 가공작성

철도, 도로, 교량 등), ②중·몽 골든루트건 설계획 등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¹⁴⁾ 예를 들어 중국이 연변일보를 통해 2009년 12월 7일부터 ‘선도구전망계획요강’과 관련 100개의 중점건설대상을 소개하면서¹⁵⁾ 대외통로부문의 12개 프로젝트¹⁶⁾를 공개한 것(〈표 1〉 참조)은 북한과 러시아에게 연계인프라 건설을 촉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의 라선시 재평가의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의 연해주와 라선시에 대한 관심 증대로 중국과 러시아간 경쟁구도의 형성이

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2005년 9월 GTI(Greater Tumen Initiative)체제¹⁷⁾의 등장을 전후하여 ‘도로-항만-공업구 일체화전략’을 가시화하면서 북한과 나진항 공동개발협상을 본격화했다¹⁸⁾. 북·중 합영회사인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가 나진항 3호 부두 50년 이용권과 4호 부두(신규건설 필요) 50년 경영권을 획득한 것¹⁹⁾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북·중간 후속협상의 결렬로 사업진행이 여의치 못한 가운데, 두 만강하류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 14) 우하오(Wu hao), “창치투(長吉圖)개발개방선도구와 대 투먼강(圖們江)지역협력개발과의 관계,” 『대두만강 개발계획과 환동해권지역의 발전전략』, 강원발전연구원·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주최 한-중 세미나, 2010. 4. 7, pp. 26~29.
- 15) 연변일보(<http://www.iybrb.com>), “100개 중점건설대상 소개 1,” 2009. 12. 7.
- 16) 연변일보(<http://www.iybrb.com>), “〈선도구전망계획요강〉관련 100개 중점건설대상 소개 5,” 2009. 12. 21, 연변일보(<http://www.iybrb.com>), “〈선도구전망계획요강〉관련 100개 중점건설대상 소개 6,” 2009. 12. 23, 연변일보(<http://www.iybrb.com>), “〈선도구전망계획요강〉관련 100개 중점건설대상 소개 7,” 2009. 12. 28 참조.
- 17) TRADP 제8차 5개국위원회 회의(2005. 9. 長春)의 합의사항은 ①1995년에 합의된 ‘5개국위원회협정’을 10년 연장하고, ②TRADP를 확충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을 추진하며, ③회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제고와 더불어 UNDP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④사업대상지역은 북한의 라선특구, 중국 동북삼성 및 내몽골, 몽골 동북지역, 러시아 연해주, 한국 동해안(강원, 부산, 울산, 경북) 등을 모두 포함하며, ⑤기업자문그룹(Business Advisory Council)을 설립하여 동 지역 개발을 위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⑥인프라, 에너지, 관광 등 핵심분야(priority sectors)사업을 확충한다는 것 등이었다(<http://www.tumenprogramme.org>; 검색일 2010년 6월 14일).
- 18) 2003년 10월, 중국 국무원이 동북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에서 ‘路, 港, 區一体化(도로·항만·지역 일체화)건설’을 언급한 이후 훈춘(琿春)시 정부는 11월 동 프로젝트계획을 라선시인민위원회에 제출하고 12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9월에 기본합의를 달성했다. 2005년 7월 10일에는 중국의 훈춘동림경제무역유한공사 및 훈춘합작구보세유한공사와 북한의 라선시인민위원회 경제협조회사간에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중국어명: 朝鮮羅鮮國際物流合營公司; The Rason Joint Venture Company of International Logistics)” 설립과 관련된 합작계약서(合資公司合同書)가 체결되었고, 7월 22일에는 북한 경제협조관리국으로부터 기업청설승인서를, 8월 23일에는 라선시인민위원회로부터 기업등록증을 취득했다.
- 19) 합작의 주요내용은 중국과 북한이 50대 50 절반씩 투자하여 ①원정-나진항간 도로건설과 경영, 도로구획 봉사시설 건설 및 경영, ②연 100만톤 규모의 중계화물조직 및 수송대리업무, ③5km²규모의 보세가공구와 공업구개발 및 경영, ④연산 100만톤 규모의 HEC고결제(도로포장용 시멘트관련 특허품)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등록자본금 60,904,000유로(74,907,000달러상당)인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를 설립하되 북한측은 항만, 도로, 부지 등의 이용권을, 중국측은 30,452,000유로(37,453,500달러상당)의 자금, 설비, 건축 자재 등을 투자(현금투자분 10,000,000유로; 12,300,000달러상당)하는데, 나진항 제3호 부두와 제4호 부

우려한 러시아가 협상에 개입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2008년 4월 북한과 러시아간의 『조로모스크바선언(2001.8.4)』에 따르는 북한과 러시아간의 철도부문 협력사업의 첫 단계조치의 일환으로 나진항 3, 4호 부두의 이용권과 경영권이 러시아로 넘어가면서²⁰⁾ 라진-하산철도 및 나진항 개건 착공식(2008. 10.4)이 라선시 두만강역 조로친선각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북한과 러시아간에 합의된 나진-하산구간 철도의 개건거리는 54km로 연간 400만 톤의 수송능력에 연간 10만 개의 짐함(컨테이너) 수송능력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나진항의 개건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는데 ①노후화된 기존설비의 제거, ②컨테이너, 크레인 비롯한 새 설비들의 반입, ③부두시설의 건설과 도크의 확장 등을 주요사업내용으로 하는 제1단계 사업은 2010년 10월말까지 완공한다는 것²¹⁾이었

다. 그런데 이는 중국의 대라선전략 뿐만 아니라 동북삼성개발전략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전개였다.

세 번째 이유는 남북경제관계 개선의 정체였다. 2차 핵실험(2009.5.25)이후 북한은 ①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접견(2009.8.16), 특사조의방문단의 파견(2009.8.21~23) 등의 유화책, ②10·4선언의 이행과 관련 유연한 입장 표명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²²⁾을 비롯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희망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09년 신년사설에서 “우리는 올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표대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

두(신규건설 예정)의 50년 이용권 및 경영권, 원정-라진항간 도로의 50년 운영권 등은 합영회사인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에 부여했다.

- 20) 북한 철도성과 러시아 <로씨야철도>주식회사사이의 협조에 관한 협정과 나진항과 <로씨야철도무역>주식회사사이의 합영기업창설에 관한 계약서는 2008년 4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되었다. 조선신보, 2008. 5. 2.
- 21) 리상영, “조로 대규모협조사업의 첫 단계,” 『조선신보』, 2008. 10. 10; 리상영, “조로국경지대, 대륙간의 수송기지로: 전길수 철도상 인터뷰,” 『조선신보』, 2008. 10. 17.
- 22) 2010년 2월 MBC는 정상회담추진을 위한 남북한간 극비접촉사실(2009. 10. 17~18: 싱가포르)을 보도했다. MBC보도에 의하면 북측은 당시 ‘6자회담 복귀’를 명문화하는 대신 김정일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실체 만났을 때 이른바 ‘통 큰 결단’의 형식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밝히는 방식을 제시했고, 남북자와 국군포로는 다만 한두 명이라도 이대통령과 함께 귀환하는 선에서, 남측은 예년 수준의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정상회담 혹은 수뇌회담 등을 수시 개최’하는 것으로 가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11월, 남측 통일부와 북측 통전부 접촉 때 남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자를 대폭 늘려달라는 남측 요구에 북측이 반발했고, 쌀 일부를 정상회담 전에 미리 선적해 달라는 북측 요구에 남측이 ‘대가가 아닌, 인도적 지원’임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회담이 결렬되었다는 것이었다. MBC 뉴스데스크, “남북, 작년 접촉 때 의견접근: 싱가포르 접촉 때 상당부분 합의,” 2010. 2. 4.

〈표 2〉 라선경제특구의 최근 동향

연월일	내 용
2008.10.04	러시아 나진-하산철도 및 나진항 개건착공식 진행
2009.10.06	중국 온가보총리의 북한방문, 나진항 공동개발에 관한 협의
2009.12.16	김정일국방위원장 라선대흥무역회사와 라선시를 현지지도
2009.12.18	남북합작기업인 칠보산매리합작회사(통조림공장)의 기업창설승인
2009.12.29	라선시 중국 훈춘시와 두만강다리(원정-권하) 보수공사 합의
2010.01.04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발표
2010.01.27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
2010.03.02	중국 국가관광국 「중국 관광단체의 조선관광실현에 관한 양해문」에 따라 4월 12일부터 북한관광 허용
2010.03.15	라선특별시 훈춘시와 원정-권하간 두만강다리 보수공사 착공식 진행
2010.04.13	조선관광무역회사의 연결대표처에 조선관광비자의 직접취급을 허용
2010.04.21	라선특별시 몽골 도로·운수·건설 및 도시경영성과 경제무역협조발전에 관한 양해문 조인
2010.05.12	중국 국가해관총서 훈춘-나진-상해를 잇는 석탄수송 해상항로의 개설을 승인

출처: 조선신보, 2010. 5. 14; 연변일보, 2010. 3. 15, 4. 26, 5. 11; 길림신문, 2010. 3. 27; 흑룡강신문, 2010. 5. 12 등을 참조하여 작성.

이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바란다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옹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2010년 신년사 설에서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남조선당국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언제가도 개선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

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라선시와 관련, 남북경제협력에 새로운 징후가 나타난 것은 2009년 9월부터였다. 남한기업인 (주)매리가 북남경제협력법과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북한의 개선총회사(사업파트너는 라선강성무역)와 합작계약을 체결(2009.9.30)하고 남북합작기업인 칠보산매리합작회사(통조림가공업)에 대한 기업창설승인서

를 취득(2009.11.18)하였는데,²³⁾ 이는 라선경제특구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로 지위가 변경된 이후 북한이 남한기업의 직접진출을 허용한 첫 사례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진항 3호 부두의 사용권이 러시아로 넘어간 이후 중국 최고지도부가 나진항 공동개발의지를 또 다시 표명한 것은 2009년 10월 온가보의 방북²⁴⁾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속에 북·중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라선개발구도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2. 특별시 건설실태

최근 라선특별시 건설에 있어서 주목되는 흐름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중국의 태도변화였고, 다른 하나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개정이었다. 중국의 태도변화는 먼저 인프라건설에서 나타났다. 과거와 다른 정부의 적극적 자세였다. 훈춘시가 라선특별시 인민위원회와 함께 2010년 3월 15일 착공식을 진행했던²⁵⁾ 중국 원정-북한 권하간의 두만강다리 보수공사가 5월말 완료, 개통되었다.²⁶⁾

1938년에 건설된 원정-권하다리의 중국측 구간은 2001년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으나 북한측 구간은 북·중간의 이견으로 그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으나 보수공사비용 360만 인민폐를 중국 훈춘시가 전액부담하는 방식으로 타결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중국의 태도변화는 2008년 4월 나진항 3호 부두의 사용권이 러시아로 넘어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중국 요령성 대련창립경제무역유한공사(大連創立經濟貿易有限公司)는 2008년 7월, 북한의 라진강성무역회사와 나진항 1호부두 등 관련사업의 현대화를 위한 합영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침을 받아 동년 11월에 1호 부두관련사업을 착공하기 위해 훈춘에 초기자본금 3천만위안으로 훈춘창립해운물류유한공사(渾春創立海運物流有限公司)를 설립했다.²⁷⁾ ‘훈춘창립’의 석탄운송을 위한 나진항 1호 부두의 현대화사업(1만 5천톤급 선박의 접·이안이 가능한 수심 9m 준설, 석탄의 원활한 선적을 위한 컨베이어 자동설비 등)과 인근 비료중계장 8,100m²를 석탄창고로 개조하는 작업이 완료된 것은 2009년 6월경이었

23) (주)메리 홈페이지(<http://www.merry.com.cn>) 참조.

24) 지영일, “새 전망 펼쳐지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조선신보』, 2010. 5. 14.

25) 연변일보, “권하통상구 다국대교보수공사 정식 가동,” 2010. 3. 15; 길림신문, “훈춘 권하-원정 국경대교 보수공사 정식으로 가동,” 2010. 3. 17.

26) 흑룡강신문, “훈춘 중조권하-원정국경대교 5월 30일 통차,” 2010. 5. 24.

27) 백성호, “두만강유역개발 현황과 발전전망,”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근 두만강유역개발 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 2009. 12. 9, p. 30.

으나²⁸⁾ 중국의 1호 부두 진출사실이 표면화 된 것은 2009년 10월 온가보총리의 방북직 후였다. 정리하면 나진항 1호 부두 10년 사용권을 획득한 '훈춘창립(渾春創立)'의 對나진항 진출전략은 과거 나진항 3호 부두 진출을 위해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를 설립했던 '훈춘동림(渾春東林)'과는 달리 언론노출의 기피였다.

중국 태도변화의 또 하나는 對조선관광정책이었다. 2010년 3월, 중국 국가관광국은 2009년 10월 북·중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2010년 4월 12일부터 북한관광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북경과 천진, 상해,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하북성, 산둥성, 강소성, 광둥성 등 10개 성과 시의 395명으로 구성된 첫 북한관광팀이 4월 13일 북한으로 출발했으며, 삼함-청진-칠보산 관광코스도 2010년 5월 14일 정식으로 개통되었다.²⁹⁾ 주지하다시피 라선지대에 대한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진 것은 2005년 1월

부터로, 이는 2004년 12월 중국정부의 도박금지령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홍콩 엠페레그룹이 투자한 영황오락주점은 불법도박의 온상으로 중국 언론에 집중 소개³⁰⁾됨에 따라 중국 관광객이 주요고객이었던 라선시 영황호텔의 카지노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³¹⁾ 그런데 주목할 것은 북한의 비자정책이었다. 북한이 조선관광무역회사 연결대표처에게 관광비자발급권을 부여함³²⁾에 따라 2010년 4월 13일부터는 심양 북한영사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다음은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개정이었다. 북한의 라선특구법은 1993년 1월 31일 자유경제무역지대법으로 시작해 1999년, 2002년, 2005년, 2007년, 2010년 모두 다섯 차례 수정·보충되었는데, 그중 의미 있는 전환은 1999년 2월 26일 수정·보충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제484호와 2010년 1월 27일 수정·보충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제583호였다. 전자는 자유경제

28) 2010년 3월 8일 연변조선족자치주 리용회주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중국 대련의 한 기업이 나진항 1호 부두의 10년간 사용권을 획득하여 현재 수천만 위안을 투자해 설비건설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측과 협의하여 나진항 1호 부두의 사용권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北나진항, 리 50년 사용," 2010. 3. 8. 또한 흑룡강신문도 "2008년 연변과 훈춘시정부 관련부분은 조선측과 협상결과 대련 모기업 훈춘지점이 나진항 1호 부두 10년 사용권을 획득했으며 현재 3000만 위안을 투자해 제1기 개조공사를 완성했다고 보도했다. 흑룡강신문, "동북석탄자원 중조 황금다리 건너 남방 간다," 2010. 3. 23.

29) 길림신문, "4월 중순부터 중국인 조선관광 <봄맞이>," 2010. 3. 27; 연변일보, "중국 첫 조선관광팀 12일 조선으로 향발," 2010. 4. 13; 연변일보, "조선 청진-칠보산 관광코스 개통," 2010. 5. 24.

30) 연변뉴스(<http://www.yanbiannews.com>), "도박과의 전쟁 선포한 중국... 주적은 북한?," 2005. 2. 1.

31) 배종렬, "북한의 외자도입현황과 과제: 라선경제특구 사례분석," 『수은북한경제』, 2005년 겨울호, 한국수출입은행, p. 47.

32) 연변일보, "조선관광 훨씬 편리해져: 조선관광비자 연결서 수속," 2010. 4. 26.

무역지대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로 라선시의 지위변경과 관련된 법이고, 후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한 이후 처음 개정된 법이었다. 1999년 법규정과 대비해 볼 때 2010년 법규정의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표 3〉 참조).³³⁾

첫째, 특별시 지정에 따른 지대관리운영조직의 개편과 함께 임무와 권한의 조정이 있었다. 우선 중앙경제협조기관(1999년 법체계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중앙기관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중앙조직을 라선경제무역지도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라선시인민위원회의의 권한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①지대법·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칙 작성, ②지대에 대한 투자유치사업, ③지대예산의 편성과 집행, ④지대의 계획화사업, ⑤투자의 심의·승인, ⑥토지와 건물의 임대·양도 등의 임무와 권한이 추가되어 해당중앙기관의 일부업무가 라선시인민위원회의로 이관되었다³⁴⁾. 그리고 라선경제무역지도기관의 임무와 권한은 ①지대개발, 경제무역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대책의 수립, ②지

대에 대한 투자유치사업, ③지대개발과 경제무역사업의 장악지도, ④ 지대에 대한 중요투자대상을 심의, 승인으로 규정해 역할을 강화했다.³⁵⁾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지대개발과 관리운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기 위해 지대에 비상설로 라선경제무역지도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17조의 규정으로, 이는 국방위원회의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및 국가개발은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북남협력법제와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의 모순체계를 시정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지대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외국투자자로 한정했다. 그런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투자자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으로 규정되어 있어³⁶⁾ 남측이나 해외조선동포의 라선지대 투자에 대한 법체계가 애매하였다. 즉, 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2호로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측의 법인과 개인이 북측의 기관·기업소·단체와 경제협력을 할 수 있도록

33) 2~4차 수정·보충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①지대관리운영기관의 명칭변경, ②법 조항별 제목 설정을 비롯한 법체계의 세련화 등 부분수정에 불과했다. 따라서 2차 수정과 5차 수정을 직접 비교하더라도 큰 무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2~4차 수정·보충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표 3〉을 작성하였다.

34)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999년과 2005년에 의하면 해당중앙기관은 “라선경제무역지대개발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은행, 토지임대, 국토 및 도시건설, 건설명시허가 같은 사업을 자기임무와 권한에 맞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5)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999년과 2005년에 의하면 중앙협조관리기관(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 외국투자자와 관련한 집행대책, 해당 중앙기관들과의 연계밑에 경제무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 외국투자대상신청을 접수하고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36) 외국인투자법(2004.11.30 수정보충) 제2조.

〈표 3〉 2010년 개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주요 특징

구분항목	라선경제무역지대법(1999. 2. 26)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10. 1. 27)
법의 사명	지대의 효과적 관리운영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 개선
지대의 지위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 중계수송, 금융, 관광, 봉사지역
투자분야와 장려부문	규정 없음	- 투자분야: 공업, 농업, 건설, 운수, 통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 등 - 장려부문: 첨단기술·과학연구, 하부구조건설, 국제경쟁력이 높은 제품
지대사업의 국가지도	내각의 통일적 지도	라선경제무역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
투자형식	합작, 합영, 단독투자 같은 형식	직접투자나 간접투자 같은 여러 형식
해외조선동포의 경제무역활동	규정 없음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포함
지대개발과 관리운영	-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중앙기관: 자기임무와 권한에 따라 지대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을 지도 - 라선시인민위원회: 현지 집행	- 라선경제무역지도기관: 지대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을 지도 - 라선시인민위원회: 현지집행
기술인재 육성	규정 없음	기술기능실습을 위한 노동력 해외파견 가능
비상설지도위원회 운영	규정 없음	신설(지대개발과 관리운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때 해결)
특수경제구의 운영	규정 없음	정해진데 따라 공업구, 농업구, 과학기술구, 가공무역구 등 설립운영
지대밖 기관·기업소·단체와의 경제거래	규정 없음	지대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투자기업은 지대밖 기관·기업소·단체와 경제거래 가능
지대밖 위탁가공	외국투자기업만 가능	지대의 기관·기업소·단체도 가능
월로임 최저기준	규정 없음	라선시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과 합의
결제화폐	조선원 또는 전환성 외화	조선원 또는 정해진 외화
소득세율	결산이익의 14%	결산이익의 14%이나 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 10%
무사증제 실시	해당절차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 가능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 무사증제 실시

출처: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제 484호, 제 583호

록 규정했고, 북남경제협력법의 하위법체계인 개성공업지구법에서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제2조)하면서 이들을 투자가란 용어로 통일했었다. 2010년 수정·보충된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는 이 법에 따라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제8조)”고 규정하는 한편, ‘외국투자가’를 모두 ‘투자가’란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이러한 모순점을 해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특별시와 북한의 여타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기존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위탁가공에 한해서 라선지대에 진출한 외국투자가에만 지대밖의 북한 기관·기업소·단체와의 거래를 허용했으나 2010년 수정·보충된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라선지대에 진출한 북한 기관·기업소·단체도 가능해졌다.³⁷⁾ 그리고 라선지대에 진출한 북한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투자기업 모두 정해진 데 따라 라선경제무역지대기관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지대밖의 북한 기관·기업소·단체와의 위탁가공 이외의 경제

거래도 할 수 있게 되었다.³⁸⁾ 따라서 라선특별시로 진출하는 외국과 북한의 기업은 라선지대를 무대로 북한의 국내경제와 외국을 연결시키는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북·중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라선지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①법의 사명을 지대의 효과적 관리운영에서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의 개선으로 개정한 것(제1조), ②투자분야(공업, 농업, 건설, 운수, 통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 같은 여러 분야)와 장려부문(첨단기술 및 과학연구, 하부구조건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의 생산)을 명시한 것(제3조), ③‘합영, 합작, 단독투자’에서 ‘직접투자나 간접투자’와 같은 여러 형식’으로 바꾸어 투자형식의 유연화를 추구한 것(제4조), ④기술기능실습을 위해 노동력의 해외파견을 가능하게 한 것(제16조), ⑤공업구, 농업구, 과학기술구, 가공무역구 등 특수경제구의 운영을 천명한 것(제20조), ⑥외국투자기업 종업원의 월로임 최저기준을 라선시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제24조), ⑦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부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10%로 규정한 것(제39조)³⁹⁾ 등

37)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지대밖에서 위탁가공한 금액이 기업의 전체생산액의 40%를 넘지 않을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에서의 생산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1999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24조,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27조.

38)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10.1.27 수정보충) 제21조.

39) 지대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익의 14%이다.

이 바로 그것이었다.

Ⅲ. 라선특별시 개발과제

1991년 북한의 라선지역이 자유경제무역 지대로 지정된 이후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RADP)을 중심으로 라선시 개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었으나, 그 추진에 있어서 현실적 장벽은 높기만 했다. 이하에서는 라선시가 특별시로 지정된 2010년의 환경변화속에서 라선특별시의 개발과제를 ①효율적 금융시스템의 구축, ②국가간 이해조정, ③지대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범주로 나누어 기술해 본다.

1. 효율적 금융시스템의 구축

라선특구 개발 20년사를 회고해볼 때, 북한당국은 국가자금을 동원해 인프라와 산업 건설을 추진하는 금융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⁴⁰⁾ 합영은행의 설립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해법을 강구했지만, 전자는 상업은행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후자는 소요자금이 크고 회임기간이 긴 인프라건설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매력적인 조건의 제시가 어려웠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혁·개

방에 필요한 경제체제 정비방향에 대한 이해부족이었다. 국가기간산업이나 성장동력 산업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국책금융기관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건설과정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국가의 신용으로 국내외 자금을 동원해 기업에게 중장기 산업자금을 제공했던 한국산업은행(1954), 중소기업은행(1961), 한국수출입은행(1976) 등의 설립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이후 박봉주내각에 의해 금융구조개혁안이 준비되면서 새로운 흐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즉, '내각상무조'의 개혁안(2004.6)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재검토하면서 ①국책은행(국가개발은행, 에너지개발은행, 산업발전은행, 농업발전은행), ②상업은행(상공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교통은행)과 무역은행(무역은행 1~n, 합자은행 1~n), ③그리고 비금융기관(보험회사 1~n, 신용합작사 1~n)의 신설 등 은행구조개혁구상을 밝히고 ①은행계좌 설정에 기업·개인·단체별 차등폐지와 거래비밀 철저보장, ②기업·단체 등에 계좌관리를 위한 법인제 도입과 대출 약속이나 대출금 상환 미이행시 손해보상장

40) 지대개발과 관련하여 황금의 삼각주은행을 설립했지만, 동 은행의 금융사업은 정책금융과는 거리가 멀었다.

치 마련, ③외화로 예금시 그 금액만큼은 반드시 외화로 출금, ④은행결제방식 간소화와 무현금돈표제도 폐지, 그리고 거액 거래시 증표제 도입, ⑤예금자 사망시 상속인이 출금 가능하도록 제도화(재산상속법 제정), ⑥은행기구를 재정성에서 독립하여 내각 직속화하고 지점 설립권 부여, ⑦무리한 화폐교환 지양과 이러저러한 행정조치로 금융제도 불신조장 금지, ⑧독자기업 설립시 일정액의 설립금 은행예치를 의무화하고 예치금액 중 70%정도는 다시 은행대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⑨기업소가 보유한 국가 설비는 은행에 그 재산액을 등록하며 은행에 감가상각비를 납부하고 설비거래시 은행 절차 활용 등 금융제도 현대화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⁴¹⁾

동 구상은 2007년 4월 박봉주의 총리해임으로 빛이 바랬지만 2004년 9월 29일 중앙은행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686호), 2006년 1월 25일 상업은행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9호)의 채택으로 그 은행구조개혁구상의 일부가 반영되었다. 또한 국책은행 중 국가개발은행 설립구상은 개혁에 부정적이었던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의 실각이후 2010년 1월 27일 국방위원회결정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함에 대하여」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1차 회의에 전달되면서 현실화되었다. 이로써 비록 초보적이지만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인프라와 산업건설에 국가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은 구축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시스템의 경쟁력이었다. 상업은행법은 제정되었지만, 자체 상업은행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와 산업건설에 필요한 국가자금의 조달은 모두 국가개발은행의 몫이 되고 있다. 일단 북한은 계획외생산체제, 즉 국가재정예산외에 자금을 모금하겠다는 구상하에⁴²⁾ 국가개발은행 이사장으로 국방위원회 대표로서 김정일 통치자금 담당인 전일춘(39호 실장)⁴³⁾을 임명(2010.3.10)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전일춘의 이사장 임명의 모호성이었다. 물론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전임 김동운 39호실장 등이 2009년 12월 22일 EU(유럽연합)에 의해 ①입국·통과금지, ②자산동결, ③역내송금 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 대상으로 추가된 상태⁴⁴⁾라 전면에 내세우기 힘든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

41) 한기범, 「북한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 67~68.

42) 길림신문, “조선국가개발은행 평양서 공식설립,” 2010. 3. 12.

43) 북한은 2009년 5월 호텔, 식당, 외화벌이 상점 등을 운영하는 당 38호실을 39호실(광산운영, 송이버섯 채취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통합하여 김정일 통치자금 조성사업을 일원화하였다. 한기범, 앞의 논문, p. 271.

44) 2009년 12월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EU(유럽연합) 환경장관회의는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와 별개로

지만, 국제사회가 39호 실장을 국가개발은행의 등록자금 100억 달러를 유치할 수 있는 개혁·개방적 인물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3가지 방향에서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박봉주 내각이 추구했던 경제개혁의 지향점, 즉 ‘군수와 전략물자를 제외한 특수부분의 축소와 시장경제제도의 도입’이라는 방향⁴⁵⁾에서 금융시스템의 정비가 요망된다. 달리 말해 김정일 통치자금의 일부가, 당·군 산하 특수은행들의 독점적 지위 축소에 의해 조성된 자금이 국가개발은행의 자본금이 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경제로부터 중장기 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다. 북한은 2010년 ‘5·26 당 지시(식량, 단기간에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없다)’를 통해 그동안의 ‘시장통제’에서 ‘시장의 전면허용’으로 그 입장을 선회했지만,⁴⁶⁾ 북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북한당국의 시장경제추진의사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직접 전면에 나서야 할 형국으로 분석된다. 국가개발은행이 주체가 되어 박봉주내각의

‘금융제도 현대화방안’을 반영하는 모양새가 절실하다.

셋째, 인프라와 산업건설에 국가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금융시스템은 정비되었지만, 국가개발은행의 운영소프트웨어는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그런데 중국의 국가개발은행, 남한의 개발금융기관 등이 북한 국가개발은행의 준거모델로 그동안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시점에서 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개발은행의 운영시스템을 설계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다.

2. 국가간 이해조정

근대에 들어 라선지역이 국제적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만주국을 건설하면서 물류시스템정비의 일환으로 청진항, 나진항, 웅기항(현 선봉항)의 조선 북부 3항의 항로를 개통하면서부터였다. 특히 나진항의 완성은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과 만주국의 연결에 있어서 남만철도(南滿鐵道)의 대련(大連)-장춘(長春)간의 간선과 맞먹는 양대 간선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당시

EU의 자체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①입국·통과금지, ②자산동결, ③역내송금 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 대상으로 기존의 개인 5명과 법인 8개 이외에 13명의 개인과 법인 4개를 추가하였는데, 13명의 개인 가운데 장성택(노동당 행정부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동운(39호실장), 전병호(노동당 군수비서) 등이 포함되었다. 연합뉴스, “EU, 北 장성택, 김영춘 등 제재대상 지정,” 2010. 1. 10.

45) 한기범, 앞의 논문, pp. 275~276.

46)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40호, 2010. 6. 14.

일본이 전통적인 봉천(奉天: 현 심양)을 버리고 장춘을 만주국의 수도로 선택한 것도 나진항이 대련항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었다⁴⁷⁾. 즉, 나진항의 완성으로 만주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물류시스템은 부산을 중심으로 대련과 나진이 좌우날개가 되는 구도로서 남만주일대의 물자는 대련항으로, 북만주의 원료는 나진항으로 집결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초반 중국이 훈춘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북한이 두만강지역 개발프로그램(TRADP)과 연계해 나진항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때만 해도 북한의 라선지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① TRADP개발의 중심대상이 소삼각에서 대삼각으로,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초기의 공동개발의 이상이 크게 퇴색하면서, ②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북한의 라선지역 개발방기와 남한의 북방정책 퇴조가 현저해지면서, ③그리고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지속적 무관심으로 인해 동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멀어졌다.

변화의 흐름은 2002년부터 시작된 중국

의 동북진흥계획이었다.⁴⁸⁾ 특히, 2005년 장춘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새로운 對 TRADP전략이 가시화되면서 나진항의 전략적 위상은 재평가되었다. 나진항의 전략적 가치는 최근 중국 국무원이 흑룡강성의 하다치공업벨트, 길림성의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 요령성의 요령연해경제벨트 등 동북삼성개발을 국가전략으로 정식비준하면서 보다 확연해졌다. 내몽고를 포함한 길림성과 흑룡강성이 중화학공업기지, 식량기지, 자원기지로 설정되면서 나진항개발의 경제성이 증진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즉, 중국은 '路, 港, 區一体化(도로·항만·지역 일체화)계획'을 추진하면서 '제1기 연구보고서'를 2007년 5월에 완성하였는데,⁴⁹⁾ 동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나진항의 2010년 물동량은 1,266만 톤, 2020년 물동량은 3,556만 톤으로 추정되었다(〈표 4〉 참조). 이러한 중국 물동량에 한국과 일본의 물동량이 더해질 수 있다면 나진항 개발의 경제성은 증진될 것이 자명하였다. 또한 철도운송의 한계점(곡물운송의 계절적 요인 등), 중국 북방 7개 항구(진황도항, 천진항, 당산항, 황화항, 청도항, 일조항, 연운항)의 처리능력과 운송의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중국

47) 金弘直, "羅津築港과 兩大幹線主義의 完成," 『批判』, 2, 9(1932.10), pp. 13~14.

48)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6차대표대회에서 "동북지구 등 노공업기지의 조속한 조정과 개조를 지지"한다는 원칙적 입장이 담긴 보고서의 채택이 그 시작이었다.

49) 玄東日, 『豆滿江經濟圈 港灣物流研究』,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2, pp. 108~116 참조.

의 남방지역과 북만주일대를 연결하기 위해 서는 이미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동북지역 연해항구(대련을 비롯한 영구항, 금주항, 단둥항 등)의 추가개발보다는 북한의 북부항만(나진항, 청진항, 선봉항)의 개발·사용이 보다 절실해졌다.

그러나 북·중간의 이해조정은 쉽지 않았다. 장춘-길림을 엔진으로 설정하고, 동북 후배지를 버팀목으로, 훈춘을 창구로, 연길-용정-도문(연룡도)을 최전방으로 한다는 중국의 ‘장길도(長吉圖)개발구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향만 다를 뿐 과거 일본이 대련항, 나진항을 양대 간선의 기점으로 하여 장춘에 만주국 수도를 건설했던 전략과 대동소이하다. 2003년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路, 港, 區一体化(도·항만·지역 일체화)계획’도 그러한 구

상을 실현하는 방법론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路, 港, 區一体化’ 계획에 따른 중국의 나진항 3호 부두 50년 이용권과 원정-나진항간 도로의 50년 운영권은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남하라는 복병속에서 동력을 상실하면서 나진항 3호 부두의 50년 이용권은 일단 러시아로 넘어갔다.

그런데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동북진흥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동북진흥계획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①경제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백두산관할권의 길림성 이전,⁵⁰⁾ 훈춘의 길림성 특별시화 움직임, 연길-용정-도문의 합병, 연변시 구상⁵¹⁾ 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해체를 노골화했으며, ②장백산문화론의 강화⁵²⁾, 만리장성의 동단의 조작(기존 산해관에서 단둥 호산성의

50) 2006년 8월경 길림성정부는 장백산보호개발관리위원회를 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로 조정했는데, 그 내용은 “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는 성정부의 파출기구로 정청급편제, 성정부를 대표해 법에 의해 관리구역내의 경제와 사회 행정사무 및 삼림, 초원, 토지, 지하자원 등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관리를 실시”하며, “시(주)정부와 상당한 행정관리직권을 가지며 성정부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위탁한 부분 경제사회 및 행정사무 관리직능과 권한을 향유한다. 성정부에서는 장백산보호개발관리위원회를 시(주)급으로 대하고 관리한다”는 것이었다. 길림신문, “장백산관위회 정청급으로 진급,” 2006. 8. 3.

51) 2010년 3월 6일 중국 리룡회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장은 전인대 길림대표단 분조심의회에서 ‘장길도계획요강’의 시험선행(先行先試)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연변시로 조정할 의사를 표명했는데, 연변시는 산하에 3개구와 5개 현시를 두며, 연룡도를 120만명 규모의 도시로 건설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길림신문, “연변《주》를 연변《시》로 만들려고 한다,” 2010. 3. 9.

52) 1998년 6월 중국정부는 국무원비준을 거쳐 길림성정부에 대해 백두산천지를 장백산천지로 바꾸고 공개출판된 지도에도 바뀐 명칭을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1999년 1월 중국지도출판사에서 나온 중국지도집 제2판부터는 백두산천지가 장백산천지로 바뀌어 기재되었다. 장백산 문화론의 학술적 논리는 “중국의 역대왕조가 장백산을 관할해 왔으므로 장백산문화 역시 중화문화권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백두산의 전략적·역사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인식한 중국정부의 선전선동의 일환으로 길림성 공산당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인 장복유(張福有)가 길림성장백산문화연구회 회장을 맡아 각 지역에서 장백산문화연구회를 조직하도록 독려하고 장백산문화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윤휘탁,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바꾸려는 중국의 야욕,” 『시사인』, 2009. 12. 31.

〈표 4〉 中·北‘路·港·區一體化’지역의 물동량 발전현황 예측

단위: 만 톤

구분항목	2010년			2020년		
	중국의 수출	중국의 수입	소 계	중국의 수출	중국의 수입	소 계
석 탄	1,000	-	1,000	2,000	-	2,000
곡 물	60	-	60	500	-	500
철 강	-	20	20	-	40	40
시 멘 트	-	20	20	-	40	40
기 타	15	15	30	60	60	120
컨테이너 (환산 만TEU)	72 (9)	64 (8)	136 (17)	432 (54)	424 (53)	856 (107)
합 계	1,147	119	1,266	2,992	564	3,556

출처: 玄東日, 『豆滿江經濟圈 港灣物流研究』,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2, p. 115.

로),⁵³⁾ 연장성의 동단과 한사군 위치의 청천강 확장 등 유사시 북한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③북한도 최근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 압록강 두만강 일대의 북·중 국경지대에 전례 없이 박격포, 방사포부대를 배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⁵⁴⁾ 압록강·두만강 일대의 북·중 경제협력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가 잉태되고 있다.

2009년 10월 온가보 총리의 방북이후 중

국은 또 다시 나진항을 비롯한 북한의 북부항만을 확보하기 위해 한장부(韓長賦) 성장을 단장으로 하는 길림성 정부대표단을 방북(2009.10.26~27)시켰으며,⁵⁵⁾ 손정재(孫政材) 길림성 당서기는 2010년 2월 28일 장춘을 방문한 북한 중앙국제부 대표단(단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에게 “장길도개 발개방선도구의 발전은 길림성과 조선 사이에 도로교통, 기초시설건설 등 면(面)의 합작에 새로운 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

53) 2009년 9월 25일, 온가보 총리가 방북하기에 앞서 중국 국가문물교류국은 만리장성의 동단을 기존 산해관에서 단동 호산성(虎山城)으로 당기는 작업의 일환으로 ‘만리장성의 동단기점: 호산’이라고 명명하는 표지개막식을 거행했다. 연합뉴스, “中 잇단 만리장성 늘리기 속셈은?,” 2009. 9. 27.

54) 연합뉴스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2월까지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 북·중 국경 전역 국경경비대의 각 중대까지 82mm 박격포를 운용하는 화력지원 소대가 새로 편성돼 실전 배치가 끝났으며, 얼마 전부터는 함경북도 무산, 양강도 갑산 등 북·중 국경 인근에 122mm 방사포 여단들이 배치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北, 中과 국경에 박격포, 방사포 배치(소식통),” 2010. 5. 26.

55) 함경북도의 초청으로 방북한 한장부 성장은 나진항, 청진항, 김책제철소, 길림성투자회사인 청진수성천합작회사, 라선신흥연초회사 등을 둘러보고 ①나진·청진항의 합작개발과 이용방안, ②중조 집경지역 다리 보수, ③나진·청진항에 이르는 도로건설 등의 문제를 협의했다. 投資朝鮮, “吉林代表團訪朝推進合作,” 2009. 11. 10.

급했다.⁵⁶⁾ 또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이용희주장의 나진항 제1호 부두사용권의 10년간 추가 연장발언(2010.3.6)에 이어 라선특별시와 함께 원정-권하간 두만강다리 보수공사 착공식(2010.3.15)을 진행하여 중국의 북부항만진출은 순항하는 듯 했으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또다시 반전되었다.

요약하면 중국의 북한 북부항만 진출은 북·중간의 동상이몽, 달리 말해 중국의 ‘북합적인 북·중 경제협력강화론’과 북한의 ‘선군경제건설론’과의 충돌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이었다.

3. 지대의 국제경쟁력 강화

북한의 라선특별시 건설은 북한 최고권력 기관인 국방위원회가 국가개발은행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라는 수단을 통해 전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2010년 1월 27일 수정보충된 것으로 알려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1993년 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 그 후속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 비해 전향적인 조항들이 많아 일단 주목된다. 예를 들어 ①투자형식에서 간접투자의 명시(4조), ②라선경제무역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 모두 지대에 대한 투자유치사업 실

시(10조 2항 및 13조 2항), ③라선시인민위원회에 계획화사업 및 지대예산 편성·집행권, 세칙작성권 부여(13조 1, 3, 5항), ④기술·기능실습을 위한 노동력 해외파견 가능(16조), ⑤지대개발과 관리운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제때 해결을 위한 비상설지도위원회 운영(17조), ⑥공업구, 농업구, 과학기술구, 가공무역구 같은 특수경제구의 운영 가능(20조), ⑦지대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투자기업 모두에게 지대밖 기관·기업소·단체와의 경제거래 허용(21조), ⑧지대에 진출한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에 지대밖 위탁가공의 허용(27조), ⑨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부분 소득세 10% 부과(39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투자가의 중요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노동력의 활용과 관련된 법조항에서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즉, 노동력의 채용·해고는 지대의 로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23조)했다. 다만 월로임 최저기준(24조)을 정한 것은 탄력성이 있는 조항으로 라선시인민위원회 및 해당기관과 합의를 통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임금책정도 가능해졌다. 또 하나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지대에 대한 접근성은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는 무사증제를 실시(제44조)”한

56) 길림신문, “손정재 조선로동당 중앙국제부 대표단 회견”, 2010. 3. 2.


다고 규정해 1993년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규정수준(41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대접근에 있어서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에 대한 향후 북한의 정책여부이다.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외국인은 해당절차에 따라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출입, 체류, 거주할 수 있다(44조)”고 규정하고 있어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의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다른 출입, 체류, 거주절차를 적용할 수도 있다. 문제는 라선지역에 대한 남측의 출입·체류·거주 절차이다. ‘외국투자자’를 ‘투자자’로 수정하여 북남협력법제와의 모순점을 해소한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북한은 향후 라선특별시 지역에 대한 남측의 방문을 허용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남측의 방북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IV. 맺음말

2010년 5월 24일 통일부는 ①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②남북교역

중단, ③남측 국민의 방북 불허(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제외), ④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⑤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천안함과 관련된 대북제재조치를 취했다.⁵⁷⁾ 또한 유럽의회의 대북결의안 채택(2010.6.17)⁵⁸⁾에 이어 미국도 최근 천안함 관련 독자적인 대북금융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⁵⁹⁾ 북·중간 경제협력을 주축으로 하는 북한의 라선특별시 건설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 북부항만에 대한 관심은 천안함사건에도 불구하고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중국 해관총서는 훈춘-나진-상해를 잇는 석탄수송 해상항로의 내항 개설을 승인(2010.5)했으며,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삼합-청진-칠보산으로 연결되는 대북관광코스를 개통(2010.5)했다. 또한 대련우련선무회사는 육해복합물류운송망 구축을 위해 2010년 5월 18일 훈춘중련해운유한회사(선박회사)와 훈춘우련국제화물운수대리유한회사(화물운송)설립했는데,⁶⁰⁾ 동 개업식에는 강호권 훈춘시장과 배홍철 나진항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57)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발표문,” 2010. 5. 24.

58) 연합뉴스, “유럽의회, 4년만에 대북결의안 채택: 천안함 사건 관련 北 규탄 및 中, 러압박,” 2010. 6. 17.

59) 연합뉴스, “美, 천안함 관련 대북 금융제재 검토(종합),” 2010. 6. 19.

60) 연변일보, “훈춘 ‘항구를 빌어 바다로 진출’전략 새 장 연다,” 2010. 5. 27.

〈참고 자료〉

- 金弘直, “羅津築港과 兩大幹線主義의 完成,” 『批判』, 2, 9(1932.10), 批判社, pp. 13~17.
- 리상영, “조로 대규모협조사업의 첫 단계,” 『조선신보』, 2008. 10. 10.
- _____, “조로국경지대, 대륙간의 수송기지로: 전길수 철도상 인터뷰,” 『조선신보』, 2008. 10. 17.
- 배종렬,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2010. 4. 20.
- _____, “북한의 외자도입현황과 과제: 라선경제특구 사례분석,” 『수은북한경제』, 2005년 겨울호, 한국수출입은행, pp. 30~57.
- 백성호, “두만강유역개발 현황과 발전전망,”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근 두만강유역개발 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 2009. 12. 9.
- 윤휘탁,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바꾸려는 중국의 야욕,” 『시사인』, 2009. 12. 31.
- 지영일, “새 전망 펼쳐지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조선신보』, 2010. 5. 14.
- 한기범, 『북한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玄東日, 『豆滿江經濟圈 港灣物流研究』,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2.
- 우하오(Wu hao), “창치투(長吉圖)개발개방선도구와 대 투먼강(圖們江)지역협력개발과의 관계,” 『대두만강 개발계획과 환동해권지역의 발전전략』, 강원발전연구원·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주최 한-중 세미나, 2010. 4. 7, pp. 26~35.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평양, 1995.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28호.
- _____,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84호 및 제 583호.
- 외국인투자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제 780호.
- (주)매리 홈페이지(<http://www.merry.com.cn>).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340호, 2010. 6. 14.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발표문,” 2010. 5. 24.
- <http://www.tumenprogramme.org>.
- 投資朝鮮, “吉林代表團訪朝推進合作,” 2009. 11. 10.
- 연합뉴스, “中 잇단 만리장성 늘리기 속셈은?,” 2009. 9. 27.
- _____, “EU, 北 장성택, 김영춘 등 제재대상 지정,” 2010. 1. 10.

- _____, “北라진항, 러 50년 사용,” 2010. 3. 8.
- _____, “北, 中과 국경에 박격포. 방사포 배치<소식통>,” 2010. 5. 26.
- _____, “유럽의회, 4년만에 대북결의안 채택: 천안함 사건 관련 北 규탄 및 中, 러압박,” 2010. 6. 17.
- _____, “美, 천안함 관련 대북 금융제재 검토(종합),” 2010. 6. 19.
- MBC 뉴스데스크, “남북, 작년 접촉 때 의견접근: 싱가포르 접촉 때 상당부분 합의,” 2010. 2. 4.
- 노동신문, 2010. 1. 6.
- 민주조선, 2010. 1. 1.
- _____, 2010, 1. 5.
- 조선신보, 2008. 5. 2.
- _____, “국방위원회결정으로 국가개발은행 설립, 2010. 1. 27.
- _____, “對外經濟發展—環境整備,” 2010. 1. 27
- _____, “국제금융 리용하여 국가경제기반 구축,” 2010. 3. 10.
- _____, 2010. 5. 14.
- 연변뉴스(<http://www.yanbiannews.com>), “도박과의 전쟁 선포한 중국... 주적은 북한?,” 2005. 2. 1.
- 연변일보(<http://www.iybrb.com>), “100개 중점건설대상 소개 1,” 2009. 12. 7.
- _____, “〈선도구전망계획요강〉관련 100개 중점건설대상 소개 5,” 2009. 12. 21.
- _____, “〈선도구전망계획요강〉관련 100개 중점건설대상 소개 6,” 2009. 12. 23.
- _____, “〈선도구전망계획요강〉관련 100개 중점건설대상 소개 7,” 2009. 12. 28.
- 연변일보, “권하통상구 다국대교보수공사 정식 가동,” 2010. 3. 15.
- _____, “중국 첫 조선관광팀 12일 조선으로 향발,” 2010. 4. 13.
- _____, “조선관광 환원 편리해져: 조선관광비자 연결서 수속,” 2010. 4. 26.
- _____, 2010. 5. 11.
- _____, “조선 청진-칠보산 관광코스 개통,” 2010. 5. 24.
- _____, “훈춘 ‘항구를 빌어 바다로 진출’전략 새 장 연다,” 2010. 5. 27.
- 길림신문, “장백산관위회 정청급으로 진급,” 2006. 8. 3.
- _____, “〈선도구전망계획요강〉 18일 북경에서 정식 공개,” 2009. 11. 18.
- _____, “손정재 조선로동당 중앙국제부 대표단 회견, 2010. 3. 2.
- _____, “연변 《주》를 연변 《시》로 만들려고 한다,” 2010. 3. 9.
- _____, “조선국가개발은행 평양서 공식설립,” 2010. 3. 12.

_____, “훈춘 권하-원정 국경대교 보수공사 정식으로 가동,” 2010. 3. 17.

_____, “4월 중순부터 중국인 조선관광 〈봄맞이〉,” 2010. 3. 27.

흑룡강신문, “동북석탄자원 중조 황금다리 건너 남방 간다,” 2010. 3. 23.

_____, “훈춘 중조권하-원정국경대교 5월 30일 통차,” 2010. 5. 24.

_____, 2010. 5. 12.

료녕신문 [http://www.lnsm.ln.cn], “빈해 료녕은 어떻게 건설되나,” 2009. 7. 23.

環球時報(http://www.huanqiu.com), 2009. 6. 3.